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노익상 사장)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 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일반 국민여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치사회 의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매월 20일 전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EAI 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국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다른 목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일시 : 6월 20일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pm 3.5\%$

응답율 : 12.9%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철

[목차]

1. 북핵실험 이후 국민안보의식 변화-2p
2.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국정쇄신 방향-9p
3. 국정지지율/정당 지지율 변화-12p
4. [중앙선데이] 기사안-16p

1. 북핵 실험 이후 국민안보의식 변화

▣ 안보 불안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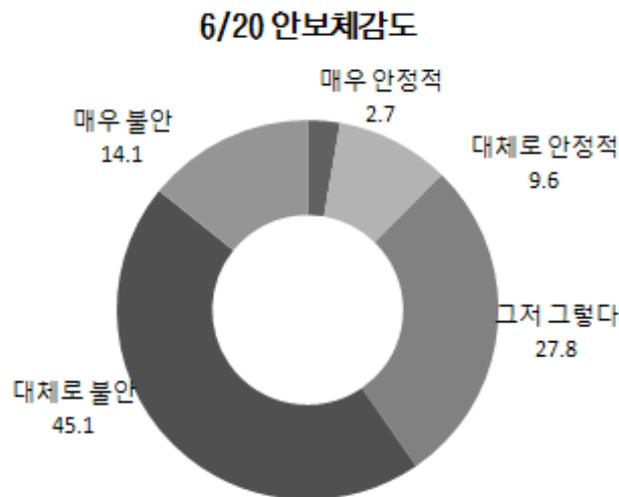
- 6월 20일 조사 : 안정적 12.3%, 그저 그렇다 27.8%, 불안 59.2%

- 안보 불안하다

29.5%(3/21)→32.8%(4/19, 북 로켓발사 후)→48.4%(6/5, 북 핵실험 후)→59.2%(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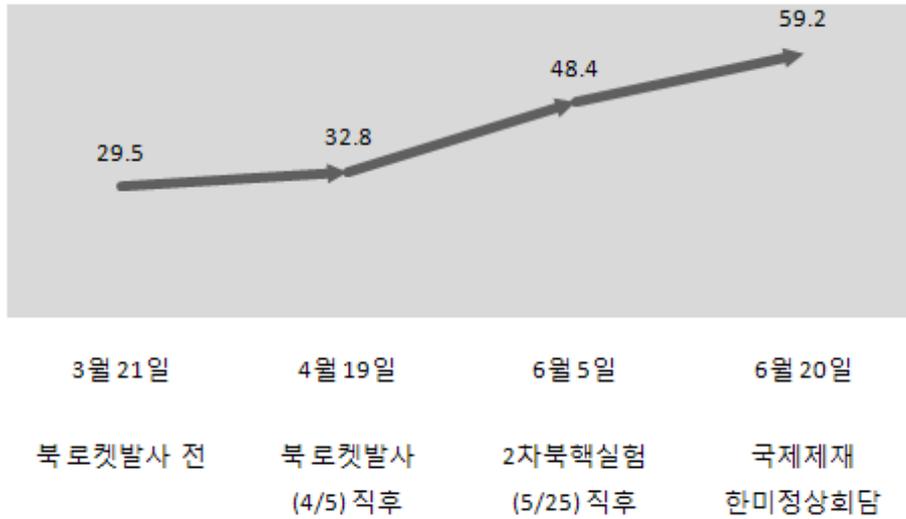
지난 5월 25일 2차 북핵실험 이후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PSI 가입 공표 및 5자회담 추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6월 초(6월 5일 조사) 시점보다도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12.3%(매우 안정적 2.7%, 약간 안정적 9.6%),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7.8%, ‘불안하다’는 응답은 59.2%(약간 불안 36.8%, 매우 불안 11.6%)로 가장 많았다.

[그림1] 현재 전반적인 안보상황



변화추이를 보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북한이 강경한 대응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3월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29.5%에 불과했지만 4월 5일 로켓발사 후 조사결과에서는 32.8%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실시한 6월 초 조사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48.4%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59.2%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림2] 한국의 안보 불안감 변화(3월-6월) : “안보상황 불안” (%)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표1] 전반적인 안보상황 평가(%)

	매우 안정적	약간 안정적	보통 (그저 그렇다)	약간 불안	매우 불안
3/21	8.8	25.7	35.6	24.3	5.2
4/19	6.8 ▼	23.3 ▼	36.4	26.5 ▲	6.3 ▲
6/5*	1.2 ▼	15.7 ▼	34.4	36.8 ▲	11.6 ▲
6/20	2.7 ▲	9.6 ▼	27.8	45.1 ▲	14.1 ▲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 2월에 비해 북한에 대한 강경 목소리 높아져, 북한 배제나 남북관계 단절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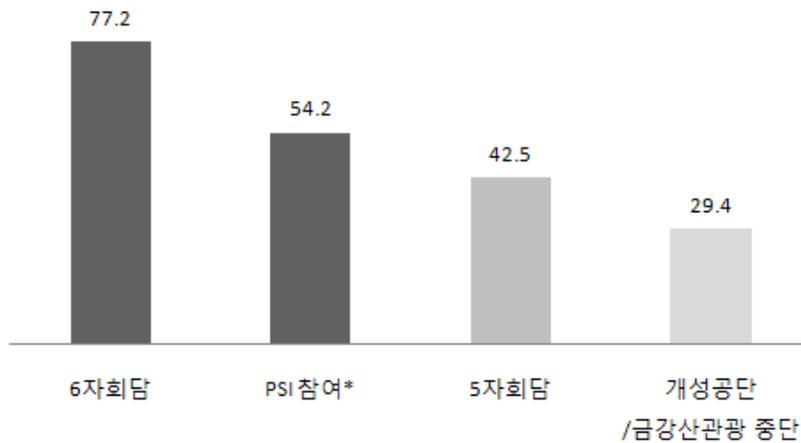
- 북한 배제한 강경책 보다는 북한 포함한 대화 선호
바람직한 북핵해법 “6자회담” 77.2%, “북한 배제한 5자 회담” 바람직 42.5%
- 2월에 비해 6자 회담 기대 줄고, 개성공단 중단 의견 높아져

안보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북핵해법으로는 역시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다. 무려 77.2%가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해결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5자회담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2.5%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1.9%에 비해 적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6%였다. 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대북지원 및 교류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4%만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65.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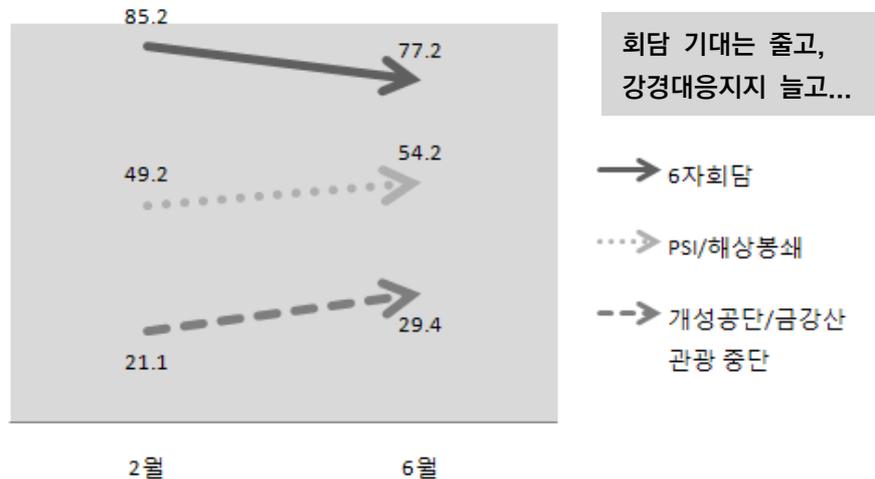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2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2월조사에서 바람직한 북한 핵문제 해결책으로 6자회담을 지지한 응답이 85.2%였지만 이번조사에서는 77.2%로 낮아졌다. 반면 대량살상무기 수선 의혹 선박에 대한 수색과 해상봉쇄를 의미하는 PSI 참여에 대한 지지는 49.2%에서 54.2%로 증가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이 대북교류와 지원을 중단하라는 주문 역시 21.1%에서 29.4%까지 높아졌다. 강경대응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

[그림1] 바람직한 북핵문제 해결책(6/20) (%)



* PSI 참여에 대한 결과는 6월 24일 추가조사 결과임

[그림2] 주요 북핵 해결책에 대한 선호변화(2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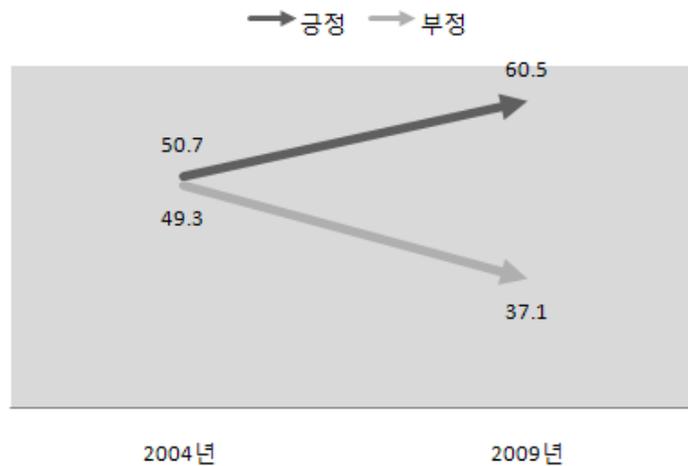
■ “한국도 핵 가져야” 60.5%, “전시작전권 행사 예정대로” 55.3%, “전쟁 발발 시 참전(지원) 하겠다” 63.0%

핵보유 인식 5년 전에 비해 핵보유 주장 9.8%p 상승

고 연령층, 저 학력층, 자유선진당/한나라당 지지층에서 핵주권 여론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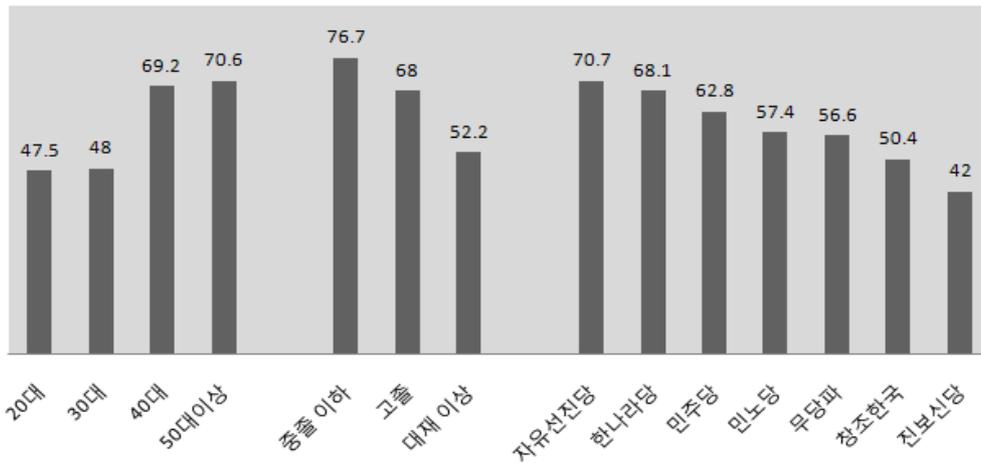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될수록 한국 국민들 사이에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을 강화시킨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열 명 중 여섯 명은 ‘매우 동의(28.8%)’ 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31.7%)’ 고 밝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25.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는 주장은 12.0%에 머물렀다. EAI와 중앙일보가 5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10%p 남짓 핵 주권 여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한 평가(%)



젊은 세대, 고학력층,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층에서는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주권에 대한 지지가 낮은 반면 고연령층, 저학력층, 보수성향의 정당 지지층에서 한국의 핵주권론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세대별보면 20대에서 47.5%, 30대에서는 48.0%가 핵주권에 부정적이었지만 40대에서는 69.2%, 50대 이상에서는 70.6%가 핵주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크게 대비된다. 학력별로 봐도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76.7%가 한국의 핵보유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졸층에서는 68.0%, 대재이상층에서 52.2%로 학력이 높을수록 핵주권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낮아진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각각 70.7%, 68.1%가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62.8%, 민주노동당 지지층 57.4%, 진보신당 지지층에서는 42.0%였다. 보수층이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진보성향일수록 남북 핵 경쟁에 비판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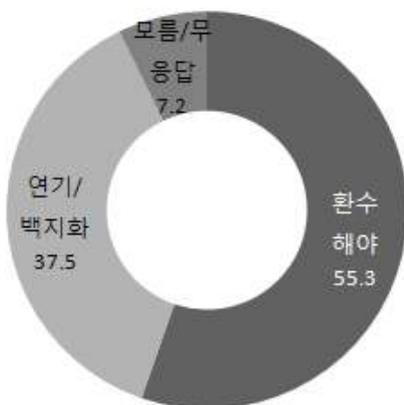
[그림2] 계층별 핵주권 여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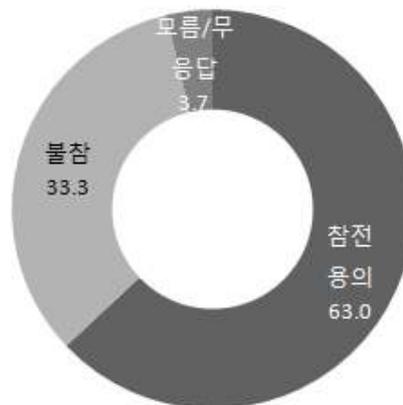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55.3% 찬성, “시기 늦추거나 백지화” 37.5%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참전 하겠다” 63.0%, “참전하고 싶지 않다” 33.3%

북한 핵실험 등 남북관계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합의사항인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55.3%가 ‘예정대로 환수’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기를 늦추거나 백지화해야 한다’ 는 의견은 37.5%에 그쳤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느냐(여성과 고연령층의 경우는 후방지원 등을 통한 참전)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0%는 참전하겠다(반드시 참전 28.5%, 가급적 참전 34.5%)고 답했다. 33.3%는 참전에 부정적(가능하다면 참전하고 싶지 않다 24.6%, 절대 참전하지 않을 것 8.7%)이었다.

[그림3]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그림4] 전쟁 발발시 참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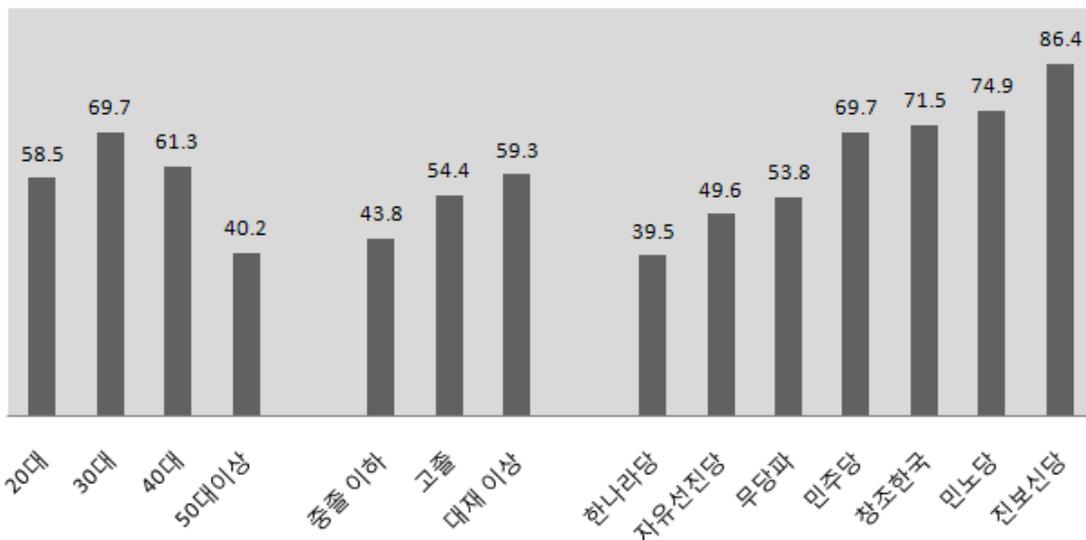


- 젊은 층, 고학력층일수록 전작권 환수 지지 높고, 참전의지 약해
- 고연령 층, 저학력층일수록 전작권 환수 부정적, 참전의지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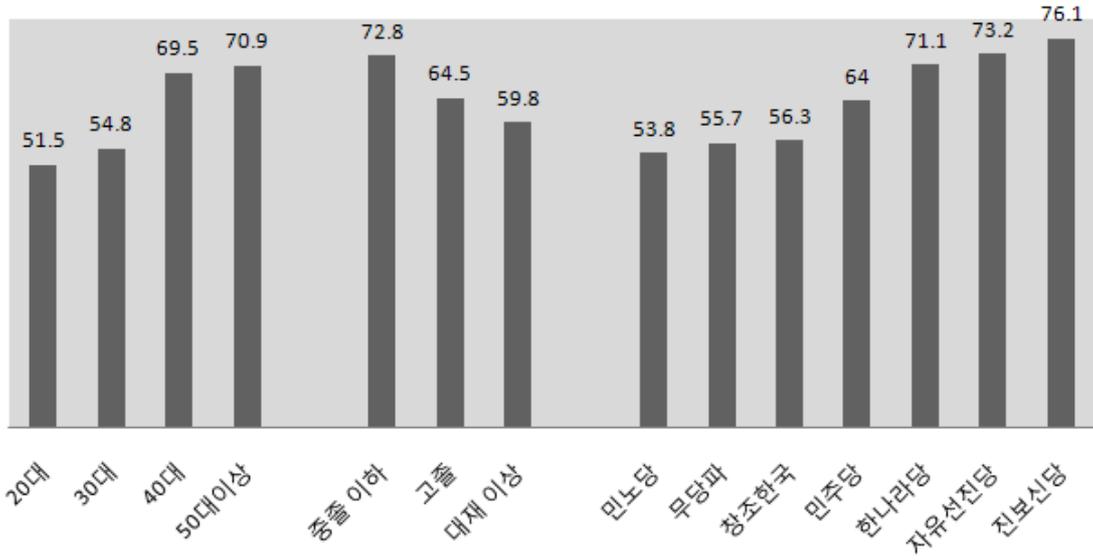
역시 사회계층 및 이념적 태도에 따라 전시작전권 환수 및 전쟁시 참전 책임감에 차이가 나타났다. 젊은 세대, 고학력층일수록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쟁발발시 참전하겠다는 의지는 약했다. 20대의 58.5%, 30대의 69.7%가 전시작전권 2012년 환수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50대 이상에서는 40.2%에 불과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재이상의 59.3%가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환수하라는 입장이었고, 고졸층 54.4%, 중졸이하 층에서는 43.8%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한반도 전쟁 발발시 참전의사에 대해서는 20대에서는 절반인 51.5%만이 참전에 긍정적이었고, 30대에서도 54.8%에 그쳤다. 그러나 40대에서는 69.5%, 50대 이상에서는 70.9%가 후방지원 등을 통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력별로도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참전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했고(59.8%), 고졸(64.5%), 중졸이하(72.8%)에서 참전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세대, 고학력층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고연령층, 저학력 층에서 보수적 성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나 유사시 참전여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과 같은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데 부정적이고, 한반도 유사시 참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지지자들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적극적이고, 전쟁참전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림5] 계층별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 찬성(%)



[그림6] 계층별 참전의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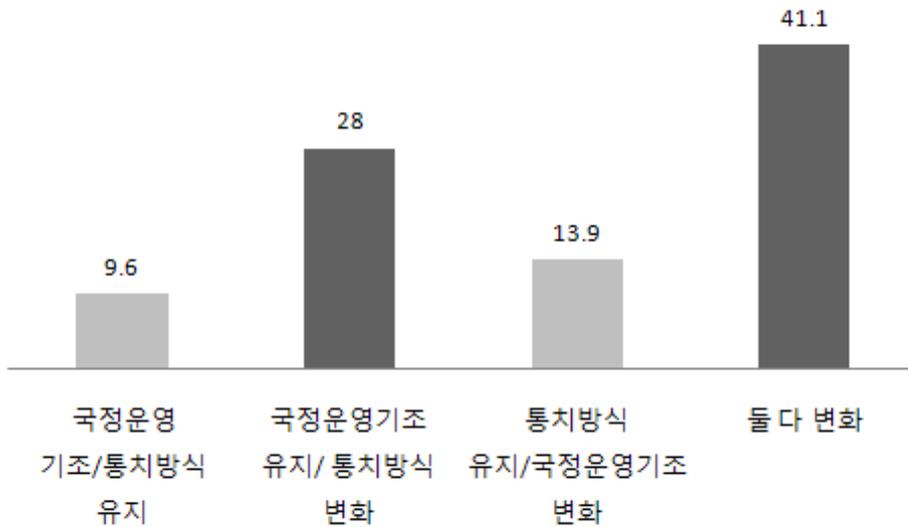
2.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바라는 국정쇄신책

▣ 이후 국정기조/통치방식에 대한 여론

- 기조 및 통치방식 동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 강해
-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기조 유지/방식 변화 43.5% > 기조/방식 유지 24.0%

정부의 국정기조 및 통치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높다. 국정기조와 통치방식 모두를 바꾸라는 요구가 41.1%, 국정운영 기조는 유지하되 통치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28.0%, 통치방식은 유지하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입장은 13.9%였다. 현재의 기조와 방식을 유지하라는 주장은 9.6%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국정쇄신 요구가 높았다. 다만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국정운영기조는 유지하면서 통치방식의 변화를 주문하는 비율이 43.5%로 가장 많았고, 현재의 기조와 방식을 유지하라는 입장이 24.0%로 근본적인 국정기조 변화는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통치형식에서만만큼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림1] 정부 국정쇄신 방향



통치 방식	변화 (50.7%)	둘 다 유지해야 한다 9.6%	국정기조/통치방식 바뀌어야 한다 41.1%
	유지 (41.9%)	국정운영 기조는 유지하되 통치방식 바뀌어야 한다 28.0%	통치방식은 유지하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13.9%
		유지(37.6%)	변화(55.0%)
		국정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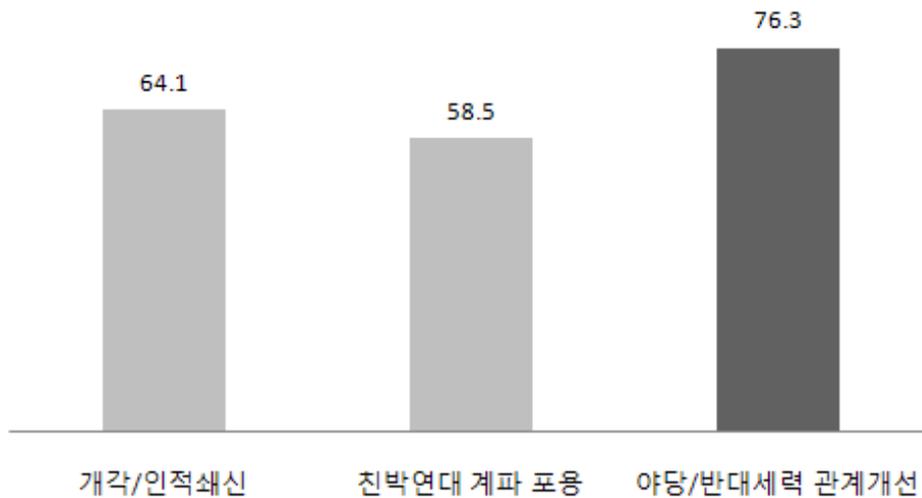
- 국정쇄신안 : 개각/인적쇄신 64.1%, 친박연대 포용 58.5%, 야당과의 관계개선 76.3%
-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국정쇄신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 높아
 - 특히 영남지역 유권자들 지지 높아
- 한나라당 내부 통합보다 정치적 반대파와의 화합이 우선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친박연대 등 다른 계파를 포용하라는 요구가 58.5%, 개각/인적쇄신안에 64.1%가 동의했고 야당/반대파와의 관계개선을 요구에 대해서는 무려 76.3%가 동의했다. 노전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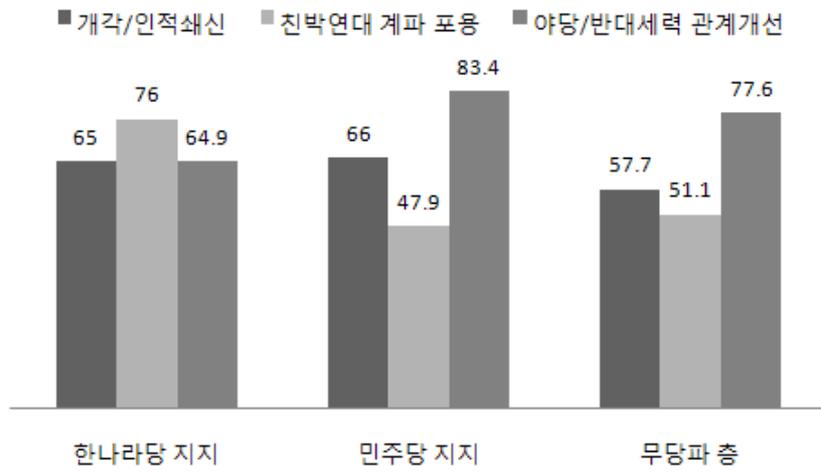
한편, 지지정당에 따라 쇄신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개각 등 인적쇄신에 대한 찬성이 많지만 친박연대 등 계파포용을 보다 강조(76.0%)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내 계파화합보다는 인적쇄신(66.0%) 및 야당/반대파 포용(83.4%)의 목소리가 높다. 무당파 층에서는 개각등 인적쇄신(57.7%)이나 친박포용(51.1%)안 등에 대해서는 지지가 평균에 못 미친 반면 야당 및 반대세력과의 화합을 강조하는 응답자가 77.6%로 가장 많았다.

결국 한나라당 쇄신평위활동이 주로 당내 계파갈등 치유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은 당내 화합보다는 당 외부 즉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아우르는 보다 큰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림2] 국정쇄신안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동의+약간 동의)(%)



[그림3] 지지정당별 국정쇄신안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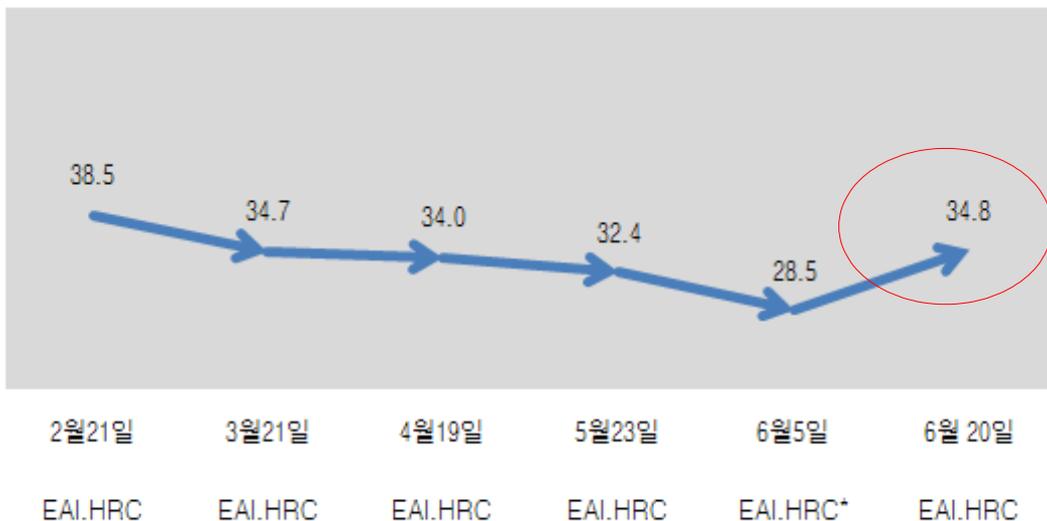
3. 노 전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 진정국면 접어들어 이대통령 국정지지 회복, 한나라당 지지 반전, 민주당 정체

- ▣ 이 대통령 국정지지, 정당지지 노전대통령 서거직후 시점 수준으로 복귀
- 38.5%(2월)→34.7%(3월)→34.0%(4월)→32.4%(5월23일)→28.5%(6월5일)→34.8%(6월20일)
- ▣ 한나라당 지지회복, 민주당 정체- 한나라당 29.0%, 민주당 23.9%, 무당파 29.0%
- 6월 5일 대비 한나라 지지율 상승(6.7%p▲), 민주당 지지율 정체(1.2%p▲), 무당파 감소(11.4%p▼)

대통령 국정지지율 34.8% 노 전대통령 서거 전 수준 회복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2주일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지지율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정국이 출렁거렸다. 그러나 그 후 다시 2주일이 경과한 지금 국정지지율이나 정당지지율에서 노 전대통령 서거 전후의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정국변화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거 후 2주 경과한 6월 5일 긴급조사에서 28.5%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번 6월 20일 실시한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에서 34.8%까지 회복되었다. 노 전대통령 서거당일 실시한 EAI 5월 정기여론조사에서 나온 32.4% 지지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그림1]. 제2차 북핵실험으로 안보불안감이 심화되고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보수층이 지지기반으로 재결집하고 이탈했던 무당파 층 일부가 복귀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1] 대통령 국정지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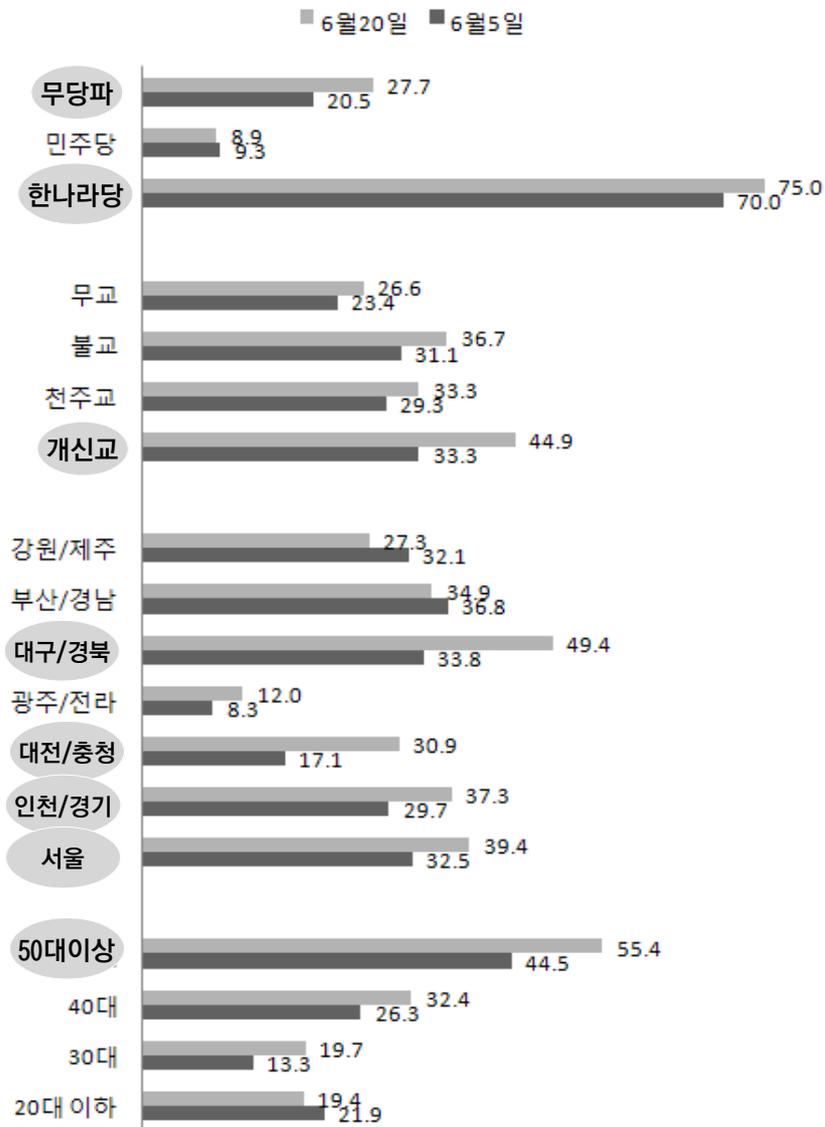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 한나라당 지지층(개신교, TK/수도권/충청지역, 50대 이상) 재 결집

▣ 무당파 층에서 MB 지지 증가(20.5%→27.7%)

실제로 6월 5일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크게 증가한 집단을 보면 정당지지로는 무당파층(20.5→27.7%)과 한나라당 지지층(70.0→75.0%)에서, 종교별로는 개신교 층(33.4→44.9%)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대구(33.8→44.4%)와 서울(32.5→39.4%), 인천/경기(29.7→37.3%)의 수도권, 그리고 대전/충청권(17.1→30.9%)에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44.5%→55.4%). 결국 한나라당 전통적인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무당파 층 일부가 MB 지지층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 사회계층별 이명박 지지율 변화(6월 5일/6월 20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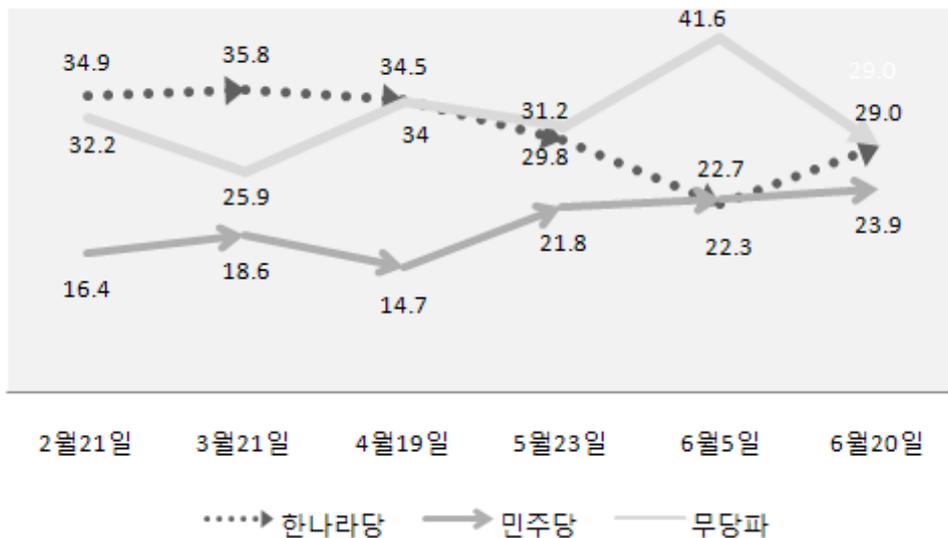


- ▣ 2주 새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한) 22.3→29.0(6.7%p ↑), (민) 22.7→23.9(1.2%p ↑)
- ▣ 무당파 총 감소, 한나라당 지지 복귀 큰 듯

한편 정당지지율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 회복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2월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4.9%, 민주당은 16.4%로 더블 스코어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한나라당 지지율은 29.8%로 20%대로 내려 앉았고, 근 2주가 흐른 6월 5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2.3%로 무려 7.5%p의 지지층 이탈을 경험했다. 그러나 다시 2주가 흘러 이번 6월 20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9.0%까지 회복하였다. 무당파 층이 41.6%에서 29.0%로 줄어들면서 상당부분 한나라당 지지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4월까지 10%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어 지난 5월 조사에서 21.8%를 기록했다. 지난 6월 5일 조사에서는 22.7%를 기록해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6월 20일 조사에서는 5월 23일 조사에 비해 0.9%p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도 23.9%에 그쳐 한나라당에 역전을 다시 허용하고 그 격차도 5.1%p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층 결집현상은 현저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대응만으로 노전대통령 서거 이후 형성된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국회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정국 정색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림3].

[그림3] 한나라당-민주당 정당지지율 및 무당파 규모 변동(2009년 2월-6월) (%)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6월)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2/21	34.9	16.4	2.7	6.7	1.5	2.5	3.1	32.2
3/21	35.8	18.6	4.0	7.1	3.5	2.8	2.2	25.9
4/19	34.5	14.7	3.1	6.8	1.8	2.9	2.1	34.0
5/23	29.8▼	21.8▲	4.2	6.4	1.2	2.2	3.1	31.2
6/5*	22.3▼	22.7▲	1.9▼	5.2▼	1.0▼	1.7▼	3.6	41.6▲
6/20	29.0▲	23.9▲	3.7▲	6.2▲	1.6▲	2.4▲	4.3▲	29.0▼

* 6월 5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 · 매일경제 공동 긴급정치현안조사(600명) 결과임

기사 초안1. 북한발 안보위기와 친미-반미 이분법 넘어선 양면적 안보인식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최근 국민들 마음속에 안보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 해에만 4월 5일 은하2호 로켓의 발사, 5월 25일 제2차 북핵 실험, 개성공단 사업의 교착 및 한국 직원의 억류 등으로 북한발 위기의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한국정부의 PSI 가입과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정 등에 다시 북한이 강하게 보복의지를 밝히면서 위기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북한발 안보위기의 심화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핵주권론이 부상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2004년 EAI·중앙일보 조사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압도했다. 현실에서 한국의 핵개발이 가져올 국제정치적 파장과 위험요소를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EAI·중앙일보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6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줄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의 중단과 같은 조치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는 입장도 열 명 중 여섯 명 꼴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는 일면만 바라봐서는 한국사회에서 표출되는 안보여론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대북 강경여론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불감증이나 반미와 친북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국민들의 인식이 ‘친미=반북’ 대 ‘반미=친북’으로 양분되기보다는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양면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지금, 이분법적 분석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양면적 태도의 공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국민여론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는 역설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12월 촛불시위 이후 동맹 대 자주의 입장이 옆치락 뒤치락했다. 2006년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대결의 식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점이 국민안보의식 변화의 핵심지점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북한에 대한 포용하자는 인식과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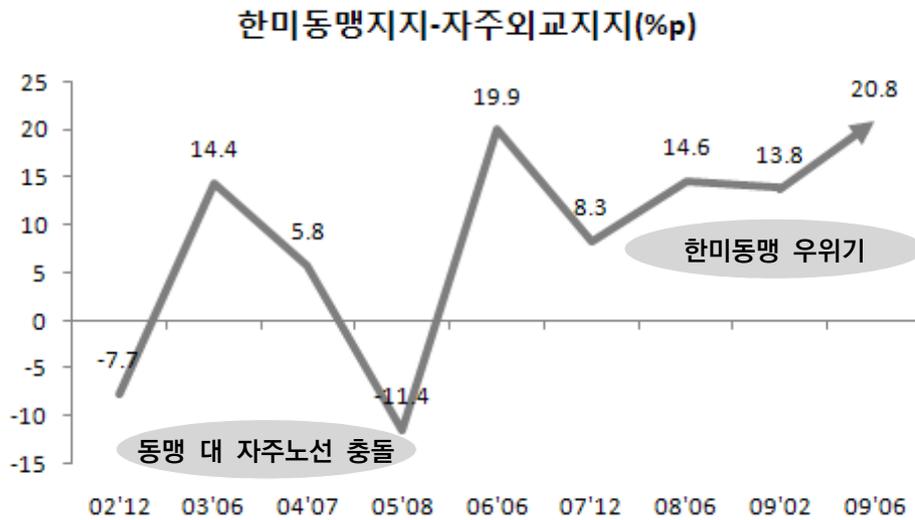
한미동맹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동시에 2012년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환수하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구상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반대한다. 개성공단 중단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지만 여전히 개성공단과 남북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은 절대다수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안보의식은 한국의 안보정착에 기회이자 도전 요소이다. 국민들 사이에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잡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는 집단적인 쓸림 현상이 약화된다. 대신 냉정하고 차분한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마련된다. 안보불안에 따라 사재기나 이민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불안요소도 발생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양면적인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고 원칙을 갖고 균형을 잡아가기 보다는 일면만을 과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화해와 통합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국민들 역시 양면적 태도의 공존 속에서 균형 잡기가 자칫 양비론과 같은 무책임한 비판만을 쏟아낼 경우 정작 위기가 현실화될 때 일치된 국민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20대 젊은 층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절반은 참전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1] 한미동맹지지비율과 자주외교 지지비율 격차의 변화(%p)



자료출처 : EAI 안보관련조사(2002-2009). 2009년 6월조사 수치는 6월 5일 EAI 별도조사 결과. (-)는 자주노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는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비율이 자주노선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 초안2. 지지율 재반전과 정부여당의 과제

이내영(고려대) · 정원철(EAI 선임연구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회복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20% 초중반대까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근 4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서는 등 국민여론이 크게 출렁거렸다. 그러나 최근 국정지지율이나 정당지지율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전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2차 북핵실험으로 안보불안감이 심화되면서 보수층이 지지기반으로 재결집하고 이탈했던 무당파 층 일부가 복귀한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정당지지로는 무당파층과 한나라당 지지층, 종교별로는 개신교 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수도권, 대전/충청권의 지지 회복이 눈에 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올 4월까지 10%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20%대에 진입하여 한나라당을 오차범위 내 에서나마 한나라당을 앞서기도 했다. 현재 지지율 상승의 동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층 결집현상은 현저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대응만으로 노전대통령 서거 이후 형성된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회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역시 책임론에서 빗겨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가 일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호재일 수 있으나 여유를 가질 수만은 없는 듯하다. 지지율이 반전되었다고는 하나 정국을 주도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내의 쇄신요구와 민주당의 압박, 그리고 단독국회 소집 등의 부담감 등 악재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민여론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변화 압력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기조와 통치방식을 바꾸라는 요구가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국정운영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통치방식 만큼은 바꾸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하루아침에 복지우선의 정책으로 돌아서거나, 여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라는 식의 요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EAI와 중앙일보가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노선이나 한미동맹으로 표현되는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국정운영기조의 변화의 요구는 정부나 여당이 강조해온 성장과 동맹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양극화 문제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반대편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치방식에서의 변화를 보자. 이번 조사에서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는 당정쇄신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열에 여섯 명은 개각을 포함한 인적쇄신에 동의했다. 야당 및 반대파를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반면 당내 쇄신 논쟁의 주요 축을 이루었던 계파간 화합과 친박계의 포용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를 받았다. 인적쇄신 요구는 얼마 전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인선에서 “나름의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추가개각이나 추가인적쇄신 가능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당내 쇄신논의의 주요 축을 이룬 계파화합의 정치는 한나라당 지지층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쇄신논의의 핵심 과제는 아니었다.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의 키워드는 “포용과 통합”이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속도전, 독주형 국정/정국 운영 대신 야당이나 반대파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용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근원적 처방’이 실용중도노선의 복귀와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여론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쇄신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천이다. 현재의 지지율 반전에 안도하기 보다는 탄핵이후 자기 쇄신을 게을리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한 지지율을 까먹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전임정부여당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AI(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정기바로미터 조사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5\%$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2.9%
조사기간	● 2009년 6월 20일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내용문의 EAI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부소장 (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동아시아연구원 정원철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